

野 압승에 ‘연금 개혁’ 향방 주목… ‘소득보장’ 탄력 전망

민주당 주요 공약, ‘공적연금 개혁’ 분야권 패스트트랙 지정 기준 상회 재정적 불확실성 등 ‘연금개혁’ 천명

4·10 총선 공약으로 ‘공적연금 개혁’을 제시한 민주당이 22대 국회 의석의 과반을 확보하면서 연금개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21대 국회가 임기 종료한 한 달 앞두고 국민연금의 모수개혁을 추진 중인 만큼 연금개혁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결과 전체 의석(300석)의 과반을 넘어 175석을 확보했다.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등 범야권을 포함한 의석은 189석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기준인 180석(전체 의석의 60%)을 상회한다.

앞서 민주당은 총선 당시 주요 공약으로 ‘국회 공적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연금개혁안 도출 및 입법 추진’을 제시했다. 국회 의석의 과반을 확보하면 민주당이 주도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한다는 공약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지난 1월 31일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다.

개별 공약은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세대별 공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청년 대상 공약으로는 ▲국민연금기금 고갈 등 재정적 불확실성 해소 ▲세대 간, 지역 간 공적연금 부담과 보장의 형평성 제고 ▲국민연금 납부 예외연령층의 최초 납부 전액 지원 및 이후

50% 지원(청년기후연금 도입) 등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의 구조 개혁을 통해 세대별 납입액·수급액 불균형 및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재정 고갈을 예방하고,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없는 27세 미만 의무소득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해 미래 소득 불확실성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중장년 대상 공약으로는 ▲중소기업을 우선으로 국민연금 수급 연령까지 정년 연장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장 확대 등을 내걸었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정년 연장을 통해 법적 정년인 60세와 수급 개시 연령(65세(2033년 기준) 사이의 소득 공백 해소를 추진하고, 기존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50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퇴직 지원도 확대한다.

노년 대상 공약으로는 ▲적정 노후 소득 보장 ▲고령자 대상 주택연금제도 확대를 제시했다.

공적연금 개혁을 통해 최소한의 노후 소득을 확보하는 한편, 주택연금 수급자가 담보 주택 이용이 어려울 시 주택을 공공임대로 전환해 해당 주택임대료를 연금액에 더해 치료·요양·양로 비용으로 지원한다는 공약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연금 개혁안은 현 21대 국회가 임기 종료한 한 달 앞두고 추진 중인 국민연금 모수 개혁(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

하는 방안)의 결과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임기 내 합의에 실패해 모수 개혁이 좌초되면 이후 개혁안에는 구조 개혁뿐만 아니라 재정 안정화 방안도 포함하는 강도 높은 개혁이 요구된다. 연금개혁이 불발될 가능성도 커진다.

다만 현재 추진 중인 모수 개혁안이 좌초될 가능성은 작다. 여야 모두 21대 임기 내 모수 개혁 완수라는 목표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월 연금특위 출범식에서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공론화위가 4월 10일 총선이 끝나면 바로 공론화 결과를 제출, 특위가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낼 계획이다”라며 “여야 지도부 모두 되도록 근시일에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김성주 민주당 연금특위 간사도 “비록 선거가 있다지만 개혁안이 만들어진다면 민주당은 총선 이후에도 정치적 타협과 결단을 통해 바람직한 연금개혁을 하자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민생 고통 덜고 국가적 위기 해소에 최선 다할 것”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등 해단식 수도권·충청·호남 등 싹쓸이 성과 “민생정치로 국민 기대 성원 보답”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에 이어 2연속 단독 과반 확보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이재명·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1일 몸을 낮추고 공을 들 냈다.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선대위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선대위 해단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세 명의 위원장 외에도 윤영덕·백승아 더불어민주당연합 공동대표도 함께했다.

이재명 위원장은 유권자가 준 뜻을 모아 국가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전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께서 행사하신 한 표, 한 표에 담긴 소중한 뜻을 우리 민주당이 전력을 다해서 받들겠다”면서 “민생의 고통을 덜고 국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적 위기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거 이후에 당과 당선자들이 더욱 더 겸손한 자세로 일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재명 위원장은 “당의 승리나 당선 기쁨을 즐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녹록치가 않다”면서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국민 주권의 원칙을 가슴에 새기고 일상적인 정치 활동에서 반드시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며 “거듭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민생정치로 국민의 기대와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부연했다.

이해찬 위원장은 만약에 민주당이 오만하면 다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개혁 과제를 의지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은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정치인들이 다시 한 번 되짚어보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저도 어떻게 국민들이 여당을 심판하는 뜨거운 의지를 보인 것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도 이번 승리에 도취해서 오만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국회에서 180명을 쫓는데 무엇을 했냐는 소리를 그동안 많이 들었지 않나. 정말 이번엔 이렇게 쫓는데도 또 못하면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해찬 위원장은 “말도 하나하나 조심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하거나 겸손하지 않는 그런 말을 할 적에 깨어있는 국민들은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

도 그로 인해서 우리가 꽤 의석을 많이 잃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인은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와 같은 것”이라며 “투명하게 모든 것을 해나가는 그런 자세로 공직생활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부겸 위원장은 민주당이 잘 해서 압승을 했다기보다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열망이 컸기 때문이라고 총선 결과를 진단했다.

그는 “민주당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정부의 흔들리는 국정 방향을 바로 잡히도록 제 역할을 하겠다”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더욱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실과 내각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전면적인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안에 제1야당의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국가적 과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합의를 해야 한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대화 정치의 복원”이라고 제안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민주당 규제 통한 안전망 확충 중시에… IT업계, ‘노심초사’

DSA패키지 쫓는 것 아니냐 우려 선허용·후규제 방식 큰 타격 전망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IT업계의 주요 입법 이슈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IT 분야는 선허용·후규제를 통한 기술 주권 확보에 집중하는 여권과 발전보다 규제를 통한 안전망 확충을 중시 하는 민주당 등 야당간 의견차가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선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관련 규제가 더욱 가속화될 것을 우려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11일 메트로경제 취재 결과 IT 분야와 관련해 최근 정부의 선허용·후규제 방식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선 최근 유럽연합(EU)에서 본격 시행 중인 강력한 플랫폼 규제 법안인 DSA패키지(DMA/DSA법)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IT업계 내에서 쟁점적으로 논의되는 법안은 ▲인공지능(AI) 기본법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이 있다. AI 기본법은 제정, 플랫폼 관련 법안은 저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하 초거

대AI협의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1대 국회 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AI 기본법은 가속도가 붙기 시작한 AI 연구 및 활용의 기본 토대를 목표로 한다. 이미 주요 AI 선도국에서는 관련 법안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유럽연합이 지난 3월 AI 기본법(AI Act)을 유럽의회를 통해 통과시키고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도 AI 부작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의무화 정책을 발표했다. AI의 비약적인 발전 이후 가짜뉴스 및 AI 활용 범죄의 범람 및 AI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 등이 대두 됐다.

또 개발과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및 인력 확충 또한 업계에서 계속 요구했지만 근거 법안이 없었던 만큼 대응과 지원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

초거대AI협의회 관계자는 “AI 기본법은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법이자 안전한 AI 환경 구현을 위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하는 법”이라며 “시민단체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율하는 등 합의 가능한 수정안을 다시 도출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더욱 넓은 범위의 IT 기업들까지 향후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플랫폼 사업자 및 입점업체 간 관계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이다. 반면 플랫폼

경쟁법은 일정 크기 이상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독과점의 사전 방지를 목표로 한다. 여기에는 카카오, 네이버 등 주요 기업들을 포함해 쿠팡 등 초대형 e커머스 기업까지 모두 포함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하려 했던 법안이 정권 임기 종료와 함께 무산됐고, 이번 정부 들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가 거센 반발에 한발짝 물러섰지만 최근 EU가 시행 중인 관련 법안과 미국 정부의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 등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리며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플랫폼 업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여전히 설파 중이다. /김서현 기자 seoh@